



# 우리는 정말 균형발전을 하고 있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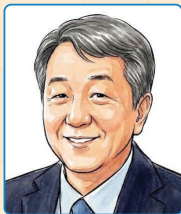
## 독일과 한국이 걸어온 길

C O N T E N T S

# 우리는 정말 균형발전을 하고 있나

## 독일과 한국이 걸어온 길

01. 기울어진 운동장, 왜 독일을 봐야 하는가
02. 독일은 어떻게 지역을 버티게 했나 - 성공과 한계의 30년
03. “분산에서 연결로”, 패러다임의 변화
04. 공장을 옮기지 말고, 삶을 옮겨라



정창무 원장  
plan@lh.or.kr



한혜숙 차장  
hanhs@lh.or.kr



손희주 책임연구원  
hj.son@lh.or.kr

### 0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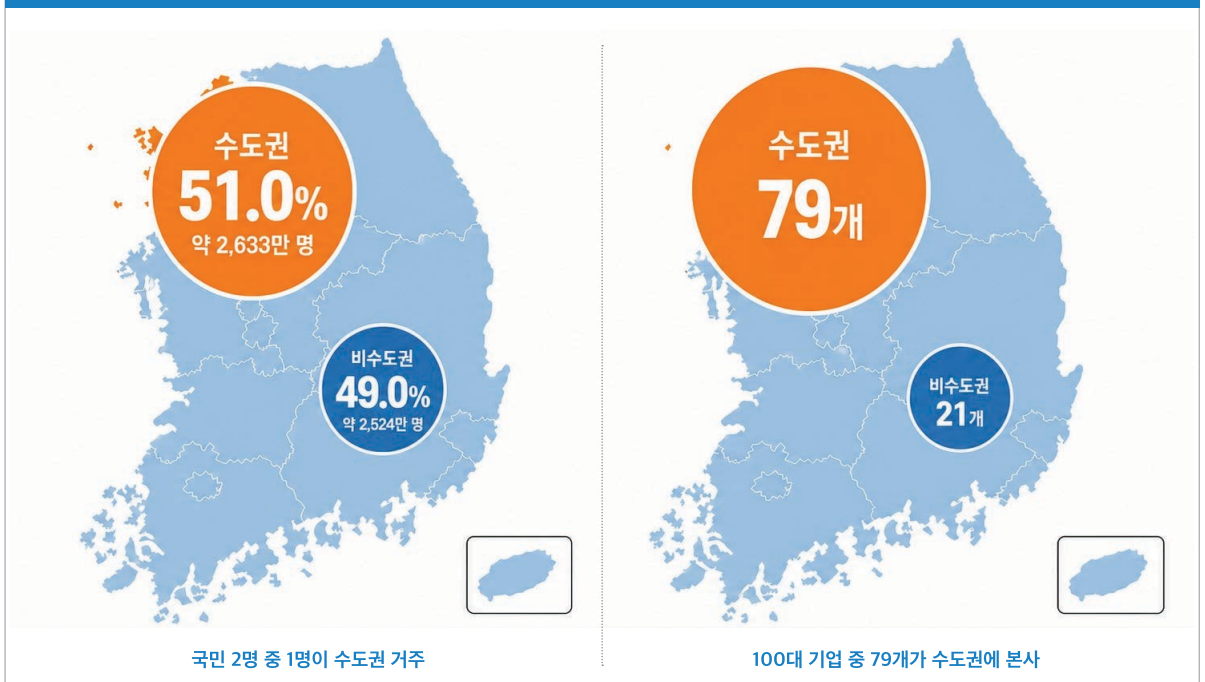
## 기울어진 운동장, 왜 독일을 봐야 하는가

### 수도권만 남은 한국, 균형의 축이 무너지다

- 국토 11.8%에 국민 절반이 산다
  - 2024년 말 기준 수도권 주민등록 인구는 2,605만 명으로, 전체 인구의 50.86%를 차지 (통계청, 2021; 행정안전부, 2025)
  - 2019년 처음 50%를 넘어선 이후 수도권 인구 비중은 계속 확대, 이전 수도권 집중을 넘어 전 국토가 수도권과 나머지 지방으로 이원화되는 단계
  - 이는 하루아침에 발생한 문제가 아닌 해방·전쟁·산업화 등 지난 70년간 누적된 구조적 결과물
- 사람보다 먼저 돈과 일자리가 수도권으로 갔다
  - 더 큰 문제는 인구만이 아니라 경제·사회의 모든 핵심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임
  - 수도권 GRDP 비중은 이미 2015년 50%를 넘어서, 경제 집중은 인구집중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옴
  - 사람이 몰려 경제가 커진 것이 아니라, 돈과 일자리, 기업이 수도권에 먼저 집중되며 사람을 끌어당긴 구조
  - 특히 지식산업, 혁신 활동, 기업 본사, 연구개발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한국의 지역 구조는 '수도권 vs 나머지 지역'으로 나뉘고 있음

사람도, 기업도, 돈도 - 모두 수도권으로

그림: 저자 생성형 AI 활용 작성



## 대기업 하청 공장만으로는 성장의 핵을 만들 수 없다

- 100대 기업 중 79개가 수도권, 부산·대구·광주는 0개
  - 국내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79개 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함
  - 이 중 서울이 56개, 경기 19개, 인천 4개로, 주요기업 본사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압도적으로 집중
  - 반면 부산·대구·광주에는 시가총액 기준 100대 기업 본사가 단 한 곳도 없음(하나금융연구소, 2025)
  - 매출액 기준으로 범위를 넓혀도 500대 기업 본사의 수도권 집중 비율은 77%에 달해, 본사 집중이 일부 대기업만의 현상이 아님(CEO스코어, 2025)
- 공장은 지방에서, 그러나 기업 경영은 수도권에서
  - 기업의 본사, R&D기능과 고급 인력 채용이 수도권에 있으면 결국 지역은 생산기지 또는 하청기지 역할
  - 대기업의 전략 변화 한 번에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취약성을 안게 된 상태가 되면서, 결국 지역에 공장이나 산업단지가 들어선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자립하는 것은 아님
  - 기업이 벌어들이는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도 본사가 있는 수도권으로 귀속됨
- 시설은 옮겨도 삶은 옮겨가지 않는다
  - 한국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, 산업단지 조성, 기업 유치 등 수도권 기능을 지방에 나누어 보내는 정책을 반복
  - 그러나 기관과 공장을 옮기는 것만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았음
  - 뿐만 아니라 사람이 지역에 남으려면 의료, 교육, 문화, 돌봄, 배우자의 일자리와 같은 생활 조건이 함께 갖춰져야 함
  - 이제 필요한 질문은 무엇을 어디에 더 배치할 것인가가 아니라, 기업과 청년이 어떻게 그 지역에 남을 수 있는가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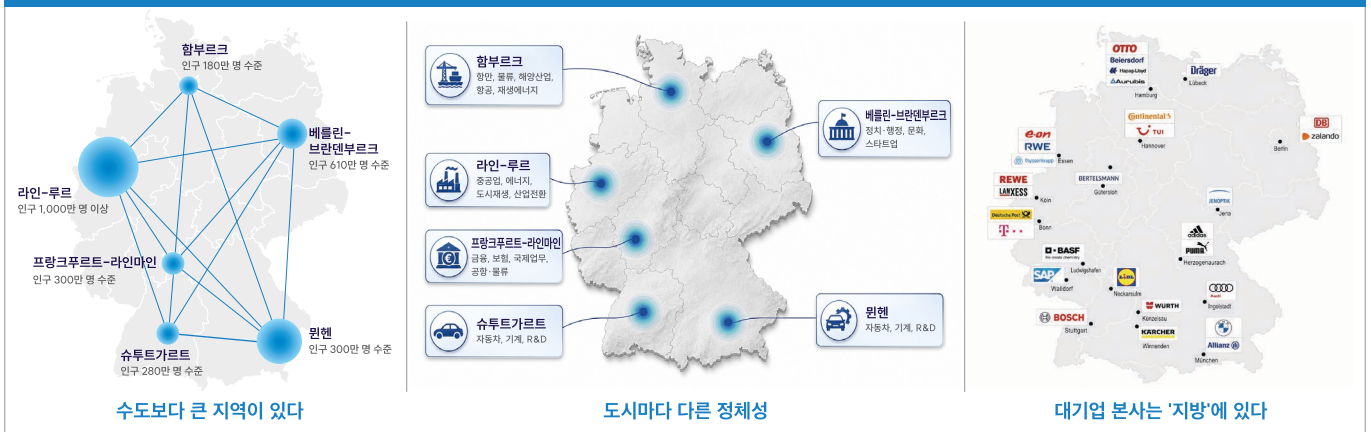
## 가지 못했던 길, 독일을 봐야 하는 이유

- 독일도 완전한 성공 사례는 아니다
  - 독일도 통일 이후 동서 간 임금·생산성 격차, 일부 지역의 청년 유출과 고령화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음
  - 따라서 독일을 완성된 답으로 보기는 어렵지만, 장기간 지역문제를 관리해 온 비교 사례로 볼 필요가 있음
- 중요한 것은 독일이 '다른 선택'을 해왔다는 점이다
  - 독일은 지역문제를 단기 시설 배치나 일회성 보조사업이 아닌, 국가적 과제로 장기간 관리해 왔음
  - 핵심은 독일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, 지역을 바라보는 방식과 정책의 지속성을 살펴보는 데 있음

## 수도권보다 큰 지방이 있는 나라

- 독일은 수도 하나가 모든 것을 갖지 않는다
  - 독일 수도권에 해당하는 베를린·브란덴부르크의 인구는 독일 전체의 약 7.5% 수준으로, 한국 수도권과 같은 일극 집중 구조와는 크게 차이
  - 독일은 함부르크, 프랑크푸르트, 슈투트가르트, 뮌헨, 라인-루르 등 여러 권역이 항만·금융·자동차·산업전환 등 각자의 기능을 나누어 맡아 왔음(OECD, 2019)
  - 수도가 정치·행정의 중심이라면, 경제와 산업의 중심은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 한국과의 근본적 차이임
- 본사가 있는 곳에 결정권과 일자리가 남는다
  - 폭스바겐은 볼프스부르크, BMW는 뮌헨, 메르세데스-벤츠는 슈투트가르트에 본사를 두고 있음
  - 본사가 지역에 있다는 것은, R&D·전략기획·고급 일자리·협력기업 네트워크가 함께 지역에 있다는 의미
  - 독일의 지역은 수도권 본사의 생산기지가 아니라, 스스로 산업을 기획하고 성장시키는 주체에 가까움
  - 이는 한국의 '본사 없는 공장지대'와 가장 뚜렷하게 대비되는 지점임

### 수도보다 큰 지방이 있는 나라 - 독일의 다핵 구조



## 막대한 재정 투입, 지역이 버틸 기반을 만들었다

- 매년 126조 원 규모, 한 세대에 걸친 투자였다
  - 독일은 통일 이후 동부 지역의 인프라, 산업, 교육, 복지 기반을 재건하기 위해 장기간 대규모 재정을 투입
  - 1990~2018년 통일 프로젝트에는 약 2조 파운드(약 3,400조 원, 2019년 가치) 이상이 지출되었고, 이는 연평균 약 740억 파운드, 원화로 약 126조 원 규모에 해당함(Enenkel and Rösel, 2022)
  - 이는 통일 직후의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, 3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지역 격차를 국가적 과제로 관리한 장기 재정투입이었음

- GDP의 0.56% vs 3.7% - 그 차이의 무게
  - 유럽위원회 ECFIN은 1991~2003년 구동독 지역에 대한 누적 총이전을 약 1.25조 유로, 순이전을 약 9,500억 유로로 추정함
  - 순이전 규모를 같은 기간 독일 GDP와 비교하면, GDP 대비 평균 약 3.7% 수준(ECFIN, 2004)
  - 반면 한국의 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05~2024년 누계 기준 GDP 대비 약 0.56% 수준에 머물러, 양국 간에는 6배 이상의 격차가 나타남
  - 이는 단순한 예산 규모 차이가 아니라, 지역균형발전을 국가적 과제로 다루는 무게의 차이를 보여줌
- 돈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이 버틸 조건으로 들어갔다
  - 독일의 재정투입은 도로와 건물만을 짓는 데 그치지 않았으며, 2003년 기준 동독 지역 이전재정 중 45%는 사회보장과 헬스케어 시스템에 사용
  - 나머지 55%는 학교, 도로, 병원 현대화, 기반시설 직접투자, 보조금, 기업 지원 등에 투입되었으며, 이는 GDP 대비 약 2% 수준으로 추정(ECFIN, 2004)
  - 즉, 독일의 지원은 기업 지원, 기반시설, 생활서비스, 사회보장이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되었고, 지역이 다시 버틸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쓰였음
  - 균형발전 재정은 지역에 예산을 나누어 주는 일이 아니라, 기업·인재·생활 기반이 함께 작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일이어야 함

표-1 GDP 0.56% vs 3.7% - 한국과 독일의 균형발전 재정 비교

구분		기준	GDP 대비
독일 통일재정	전체	1991~2003년 구동독 순이전 누계	약 3.7%
	사회급여 제외	순수 지역투자분 (사회급여 45% 제외)	약 2.0%
한국 균형발전특별회계		20년 누계(2005~2024년)	약 0.56%

[주1] 독일 통일재정은 유럽위원회 ECFIN의 1991~2003년 구동독 순이전 추정치를 같은 기간 독일 명목 GDP 합계와 비교한 값

[주2] 사회급여 제외 보정은 2003년 구동독 총이전 중 사회급여 45%를 제외한 55%를 단순 적용한 값

[주3] 한국 수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출을 같은 기간 명목 GDP 합계와 비교한 값

## 지방에서 세계 1등 기업이 나오는 나라

- 지역기업은 세계시장으로 나가는 주체
  - 독일의 '미텔슈탄트'(Mittelstand, 지방 중소·중견기업)는 부가가치의 약 50%, 고용의 60% 이상을 담당하며 지역경제의 핵심 역할을 해왔음
  - 글로벌 시장 점유율 1~3위 강소기업, 이른바 히든챔피언의 상당수가 독일에서 나오며, 이들 기업 다수는 지방 중소도시에 기반을 두고 있음
  - 지역경제의 중심이 외부 대기업의 분공장이 아니라, 지역에 뿌리내린 기업이라는 점이 한국과 다름
- 상속세 감면은 '부의 대물림'이 아닌 '고용의 대물림'
  - 미텔슈탄트의 상당수는 처음 설립된 지역에 뿌리내린 채 2~5세대를 거쳐 이어지고 있음
  - 독일은 가업 승계를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, 지역의 고용과 기술, 숙련을 다음 세대로 잇는 장치로 보았음

-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업 승계에 파격적인 상속세 감면을 부여한 것도 지역기업의 지속성과 고용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선택임

- 스스로 혁신하는 지역기업

- 독일의 중소기업 지원은 단순한 보조금 지급보다, 기업이 자체적인 혁신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두어 왔음
- 미텔슈탄트 4.0 역량센터 등은 R&D 지원, 컨설팅, 테스트베드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기술 축적을 지원했음
- 정부는 인프라와 지식을 제공하되, 기업이 스스로 혁신을 실행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의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했음
- 결국 독일의 지역기업 정책은 기업을 지역에 붙잡아 두는 데 그치지 않고, 지역 안에서 성장하고 세계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었음

## 그래도 청년은 떠난다, 독일도 막지 못한...

- 막대한 투자에도 사라지지 않는 동서간 격차

- 독일 지역정책 바탕에는 어디서든 기본적인 생활서비스를 누려야 한다는 ‘동등한 생활 조건’ 원칙이 있음
- 이러한 원칙하에 독일은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의 학교, 병원, 주거, 도시공간 등 생활 환경도 함께 정비
- 그러나 단기적 일자리 유지를 위한 구동독지역 제조업 지원은 생산성 격차와 이로 인한 임금의 격차를 낳았고, 이로 인해 구동독 지역의 청년들은 더 나은 임금과 기회를 찾아 서부 지역이나 대도시로 이동
- 결국 구 동독지역은 청년인구의 사회적 감소, 그리고 이어진 출산 저하로 인한 인구 자연 감소가 지속됨

- 그럼에도, 우리나라처럼 지역이 한번에 쏠려가진 않았다 : 청년고용의 기반, 도제시스템

- 독일 청년 직업교육 도제시스템, 즉 이원적 직업훈련(Dual System) 제도는 학교 이론교육과 기업 현장실무 훈련을 결합하여 지역의 청년고용을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동
- 미텔슈탄트는 전통적으로 독일남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, 특히 히든챔피언들은 소도시·농촌에 주로 분포
- 독일 전체 수습생(Apprentices)의 약 82~83%가 미텔슈탄트에서 훈련을 받으며, 직업훈련 수료자의 약 74%가 훈련받은 기업에 취업(BIBB, 2024; BMWK, 2017), 낮은 청년 실업률(8%)의 주요 원인
- 또한,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임금 차이가 10% 내외로 매우 적으며, 소도시·농촌 등 대도시가 아닌 지방의 지역경제가 버틸 수 있는 기반으로 작동해 왔음
- 또한 가족 경영 형태의 미텔슈탄트 기업들은 불황기에도 일자리를 보장하려는 성향이 강함

- 30년의 성과와 한계, 균형발전의 기준을 바꾸다

- 독일은 통일 이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, 서독 안에도 쇠퇴하는 지역이 나타나면서 행정구역 중심의 지원 기준은 한계를 드러냄
- 결국 독일은 ‘동독이냐 서독이냐’가 아니라, 실제로 경제 기반이 취약한 지역인지, 사람들이 일하고 생활하는 생활권 단위에서 지원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삼기 시작함
- 독일의 경험은 한계를 인정하며 정책의 방향을 계속 조정해 온 과정으로 보아야 함

### ▶ ‘동독지역’에서 ‘모든 취약지역’으로

- ‘동독 vs 서독’ 이분법적 틀은 한계에 도달한 상황
  - 통일 직후 설계된 정책은 “동독을 서독수준으로 끌어올린다”는 이분법 구조에 기반, 행정구역 기반 정책시행
  - 동서독 통일 30년이 지나자, 동독 vs 서독이라는 과거 구분으로는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에 직면
  - 2020년부터 독일은 구동독 지역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, 전국의 취약지역 통합지원 체계 도입
- 행정구역기준 지원방식은 그만: 생활권과 일자리 이동권을 고려한 지원
  - ‘노동시장지역(Arbeitsmarktregionen)’ : 생활과 일자리를 아우르는 새로운 정책 단위 설정
  - 행정구역 경계가 아닌, 사람들이 출퇴근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지역을 파악하여 정책을 시행
  - 노동시장지역은 도시와 도시가 공간적으로 연결된 지역이며 지역정책을 시행하는 단위임

### ▶ ‘시설공급’에서 ‘역량 육성’으로

- 단순 시설조성은 그만: 지역기업의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
  - 과거 구동독 지역 제조업 지원정책의 한계 도달 : 과거의 제조산업에 대한 지원이 새로운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전환을 막는 역효과 발생
  - 최근 지역정책은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, 연구기관과 기업의 연결, 혁신 네트워크 구축 등을 강조
  - 중소기업 혁신 역량 지원사업(INNO-KOM)도 이러한 흐름 속에 지역 기업의 기술개발과 혁신 활동을 돕는 수단으로 활용됨

### ▶ 한국도 변하고 있다: ‘압축과 연결(Compact & Network)’

- 우리나라도 지역별 나누기 지원에서 벗어나, 거점을 키우고 주변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전환중
  - 그간 우리나라 지역정책은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부처간에도, 정책대상 행정구역간에도 강력한 칸막이 존재
  - 그러나 지역소멸의 위기가 계속되면서 기존방식으로는 지역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 확산
  - 단순한 물리적 인구·기능 분산에 치중했던 과거 ‘균형발전’ 개념을 넘어, 지역의 성장역량 육성으로 변화중
  - 이에 따라 지역 거점을 압축적으로 키우고, 주변 지역을 교통·산업·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전략으로 전환
- 정책전환 : 지역 대학, 산업, 지자체를 하나의 생활권 안으로
  - 하드웨어 중심의 한계를 넘어 ‘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플랫폼(RIS)’ 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
  -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을 통해 도입된 ‘기회발전특구’, 「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‘도심융합특구’, 지역교육 혁신/ 인재육성/정주여건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‘교육발전특구’ 등이 그러한 시도들임

### 차이는 ‘제도’가 아니라 ‘지역을 보는 눈’

- 지역은 ‘기업과 사람이 성장할 기반’
  - 한국은 수도권 집중에 대응해 수도권의 기능과 인구를 지방으로 나누는 ‘분산’에 초점을 두어 왔음
  - 반면 독일은 ‘동등한 생활 조건’이 목표 : 어디서든 기본적인 일자리와 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함
  - 지역에 사람과 기업이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
- 공공자금 투입 규모에서 나타나는 정책태도의 차이
  - 한국의 균특회계 재정은 GDP 대비 약 0.56%, 독일은 구동독 지역격차 해소에 30년간 GDP 대비 3%
  - 이는 양국이 지역균형발전을 얼마나 중요한 국가 과제로 보았는지를 보여줌
- ‘산업시설 유치’에 몰입해온 한국, ‘지역기업의 성장’에 더 무게를 두었던 독일
  - 한국은 산업단지 조성, 저렴한 토지 공급, 외부 대기업 또는 하청 생산시설 유치에 많이 의존해 왔음
  - 반면 독일은 지역 중소·중견기업의 기술 축적, 디지털 전환,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고, 고용 유지와 사업 지속을 조건으로 가업 승계도 지원함
-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상호 협력의 대상 -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
  - 한국은 예산, 정책, 사업 모두 중앙정부 중심으로 진행
  - 그와 달리 독일은 연방과 주 정부가 재원을 나누어 부담하고 협력하는 구조를 운영함

### 지역이 살아남으려면 하나의 기둥으로는 부족함

- 독일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 : “지역을 받치는 여러 조건을 함께 세웠다”
  - 지역균형발전은 예산을 쏟고, 시설을 짓고, 공장을 유치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음
  - 지역 기업의 정착, 청년 인재 육성, 생활 서비스 확충, 충분한 재정지원, 협력적 운영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함
  - 독일의 성공과 한계는 지역균형발전이 단일 사업이 아니라 종합적 구조의 문제임을 보여줌

한국 vs 독일 : 지역균형발전의 구조적 차이

그림: 저자 생생형 시 활용 작성



- 한국형 지역균형발전 - 단순시설 배치는 그만, 지역이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

① 일자리만이 아니라 '삶의 패키지'를 묶자

: 일자리 창출 정책은 수준 높은 의료, 돌봄, 교육, 그리고 청년들이 열광할 만한 문화 인프라(정주여건) 확충과 패키지로 이루어져야 함

② 외부 유치보다 '지역 강소기업' 육성에 무게를

: 중소·중견기업들이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세 개정 포함, 고용의 대물림 설계

③ 중앙-지방의 분권·협업 거버넌스 구축

: 부처 간 칸막이와 지자체간 쪼개기 예산 배분을 넘어, 주민들의 생활권을 기반으로 거버넌스 재설계

④ 지방대학을 '지역 인재 거점'으로 다시 세우자

: 지방대학을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기업·산업과 결합한 인재 양성 거점으로 재편, 지역 기업과 밀착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 마련 필요

## **결국, 사람과 기업이 '남을 이유'를 설계하는 일**

- 분산에서 정착으로, 유치에서 육성으로

- 한국의 지역정책은 이제 무엇을 어디에 더 지을 것인가를 넘어, 어떻게 해야 그곳에 남을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함

- 독일과 한국은 역사, 산업구조, 제도, 지역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독일의 방식을 그대로 옮길 수는 없음

- 독일 사례는 기업뿐만 아니라 인재 육성과 생활기반 조성이 함께 작동할 때 버틸 수 있음을 보여줌

- “우리는 지역에 ‘남을 이유’를 만들고 있는가”

- 모든 정책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질문 : “이 정책은 사람을 지역에 남게 하는가.”

- 균형발전의 성패는 예산의 크기나 시설의 수가 아니라, ‘남을 이유’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했는가에 달려 있음

- 이제,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

- 50년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역은 소멸을 우려할 단계에 이름

- 모든 지역을 같은 방식으로 되살릴 수 있다는 전제는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음

- 일부 지역의 소멸을 막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면, 그 이후의 대안들도 고민해 봐야 할 것임

- 그럼에도, 지방의 인구소멸을 최대한 늦추고,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기업과 청년이 남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임

## 참고 자료

- 통계청. (2021). 「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」
- 행정안전부. (2025). 「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결과」
- Destatis. (2025). Population as of 31.12.2024 by nationality and federal states
- Blotevogel, H. H. (1998). The Rhine-Ruhr Metropolitan Region: Reality and Discourse
- 하나금융연구소. (2025). 「기업 본사의 수도권 집중 현상과 시사점」
- CEO스코어. (2025). 「500대 기업 본사, 수도권에 80% 밀집」
- ECFIN. (2004). Transfers to Germany's eastern Länder: a necessary price for convergence or a permanent drag?
- Destatis. (2026). Use of gross domestic product. Long term series with annual data from 1970
- Deutscher Bundestag. (2018). Transferzahlungen an die ostdeutschen Bundesländer.
- NABIS. (2025). 「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」
- 열린재정. 각 연도. 「회계별 세입·세출 결산현황」
- KOSIS. (2026). 「국내총생산(GDP)」
- 중소벤처기업부. (2025). 「2024년 스마트제조혁신실태조사 결과 발표」
- 국토연구원. (2016). 「산업단지 미분양 발생 특성 분석 및 정책과제」
- ARL. (2021). Equivalence of living conditions
- BMWK. (2026). Koordinierungsrahmen der Gemeinschaftsaufgabe "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" (GRW) ab 1. Januar 2026
- OECD. (2022). OECD Reviews of Innovation Policy: Germany 2022
- OECD. (2025). OECD Economic Surveys: Germany 2025.
- Stiftung Familienunternehmen. (2005). Facts and Figures on Family Businesses
- ErbStG §13a. 독일 상속·증여세법
- BIBB. (2020). The dual system
- 이상준(2010), "통일20년 동독지역의 국토변화와 시사점", 국토정책브리프 제293호(2010. 9. 6), 국토연구원
- <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60127149800009?input=copy>
- <http://www.the-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3518>
- Kathrin Enenkel and Felix Rösel(2022), "German Reunification: Lessons from the German approach to closing regional economic divides", Navigating economic change(2022.12)
- BIBB. (2024). Apprenticeship System.
- BMWK. (2017). Dual vocational training -a recipe for success.
- Audretsch, Lehmann(2016), The Seven Secrets of Germany Economic Resilience in an Era of Global Turbulence, Oxford University Press.
- Berlemann, Jahn, Lehmann(2020), Is the German Mittelstand More Resistant to Crises? Empirical Evidence from the Great Recession, CESifo Working Papers.

호수	제목	대표저자	발간일
58	· 신도시 근린상권 주차난의 해법, 주차장 공동개발	임주호 연구위원	2025.07.07
59	·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, 주택공급확대 대안이 될 수 있을까?	김옥연 연구위원	2025.07.21
60	· 4개 국가별 주택공급제도 비교	최대식 연구위원	2025.07.28
61	· 환경영향평가, 공탁제가 유일한 해법인가	강명수 수석연구원	2025.08.18
62	·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동향과 추진여건	송상훈 연구위원 박윤재 연구원	2025.09.01
63	· 해외국가를 통해 본 미래도시의 공간혁신 방향 · 도시혁신·공간문화를 이끄는 LH의 시대적 소명	윤정란 연구위원 김주진 연구위원	2025.09.29
64	· 2030 청년 1인가구가 원하는 집은?	정소이 연구위원	2025.10.27
65	· 공동주택 주차난, 오토발렛이 해법이 될 수 있을까?	배연희 책임연구원	2025.11.17
66	· 지방이 답이다. : 독일 히든 챔피언에서 찾은 지역균형발전 해법	이삼수 팀장	2025. 11. 24
67	· 속도와 사업성을 키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시즌2 : 규제완화 성과와 남은 과제들	김옥연 연구위원	2025.12. 24
68	· "왜 화성에는 탐사를 넘어 도시가 논의되는가"	김명인 책임연구원 손희주 책임연구원	2026.01.19
69	· 일본 도시정비사업의 재개발회사 역할 및 시사점	임정민 연구위원	2026.01.19
70	· 고령인구 천만시대 돌봄·의료·일자리·주거 연계 전략 제언	최상희 선임연구원 김경미, 이봉조 책임연구원	2026.01.26
71	· 공공분양주택 완전정복+(PLUS) 신혼부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청약 기본상식	이훈 책임연구원	2026.02.09
72	· 은퇴자 마을에 살려면 얼마가 필요할까?	정연우 연구위원	2026.02.23
73	· 로봇 경비원?	남성훈, 양홍석 수석연구원	2026.03.09
74	· 취임 이후 9개월, 대통령 부동산 메시지	양홍석 수석연구원	2026.03.23
75	· 공공분양 맞아? 84타입의 반전	손희주, 박민국 책임연구원, 김남정 연구위원	2026.04.06
76	· 도시의 나무들이 품고 있던 탄소 120만 톤, 6년의 추적 끝에 밝혀 내다	이은엽 연구위원, 이정민 실장, 김영민 전임연구원	2026.04.20
77	· AI·반도체가 키운 전력난, SMR이 답이 될까	이정민 실장, 이은엽 연구위원, 최종수 연구위원, 김명인 책임연구원	2026.05.04
78	· 세상에 이런 집이?	최상희 선임연구원, 이정은, 박민국 책임연구원, 최대식 연구위원	2026.05.04

※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호수의 포커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.

